안전대책 허술…광주글로벌모터스 5개월만에 또 사망사고

하청업체 직원 천장작업 중 추락사
공장건설 시작 1년만에 2명 사망
안전요원 투입 불구 예방조치 미흡
광주노동청 형식적 감독 지적도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한달도 안돼
광주·전남 3명 사망…근본대책 시급

'광주글로벌모터스' (GGM) 완성차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여성 노동자가 지난해 8월 사다리차에 치여 숨진 뒤 작업장 안전 조치를 강화했음에도 5개월 만에 또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기업체의 안전 수준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24일 함평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께 함평군 월야면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에서 A(54)씨가 천장 '덕트' 작업을 하다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GGM 공장 건설을 맡은 원청업체로부터 공장 내 '덕트' (공기가 흐르는 통로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청받은 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지상 9.5m 높이로 설치된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고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3인 1조로 진행하는 작업임에도, A씨의 안전 고리 설치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하청업체측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중이다.

경찰은 GGM 공장의 안전 대책도 살펴볼 계획이다. GGM측이 지난해 8월 사망사고 이후 외부업체를 통해 안전요원 5명을 공장 건설 현장에 투입해 안전지도를 진행해온데다, 사내 안전팀 직원들을 2인 1조로 해 안전순찰을 벌여왔다는 점을 감안해 안전지도·순찰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현장 CCTV 등을 분석해 밝혀낼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8월 19일 GGM에서는 60대 여성 노동자가 사다리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GGM측은 박광태 대표이사가 사과하고 무재해 공장 건설을 위한 합동 안전순찰반 운영, 안전감시단,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 등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로 GGM측의 허술한 안전 대책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도 터져나온다.

해당 하청업체가 소규모 업체라는 점에서 최근 공포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보완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고를 포함해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지난 1월 공포한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광주·전남지역 산업 현장에서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안전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영세한 50인 미만 기업들의 경우 3년 뒤부터 법 적용이 이뤄지는 만큼 안전에 대한 투자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노동청은 지난해 8월 노동자 사망 사고 때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조치 시정 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작업을 재개 했지만, 또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감독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GGM 관계자는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외주업체 안전요원 5명을 채용해 건설 현장 내 안전지도를 하고 사내 안전팀 직원들이 2인 1조로 안전순찰을 하고 있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 대책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생산 설비 설치가 진행중인 빛그린산업단지 내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내부(위)와 공장의 출입문.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항소심 앞둔 전두환 또 재판 관할 이전 신청

재판 일정 지연될 듯

전두환(89)씨가 사자명예훼손 재판 항소심을 앞두고 또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 대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전씨는 앞서 1심 과정에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냈다가 기각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전씨는 이 때 대법원에 즉시항고하는 절차까지 밟았지만 기각 당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전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절차를 밟으면서 대법원 판단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대학원생 제자 추행 전직 대학교수 항소심서 "2년간 취업 제한은 부당"

대학원생인 제자에게 못된 짓을 한 전직 대학 교수가 2년 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광주 모 대학 교수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 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징역형(집행유예),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외에도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됐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9일 서울 한 술집에서 학회 참석 뒤 열린 회식 자리에서 20분 넘게 여성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여성을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동석자를 제지하면서 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같은 해 6월 해임됐다.

재판부는 "순간적 추행에 그친 게 아니라 20분이 넘는 시간동안 계속했고 자신의 지도를 받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까지 추단하기 어려운 점, 취업제한이 의료인인 A씨에게 직업 수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 등을 들어 취업 제한은 부당하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의뢰인 추행 국선변호사 구속기소

검찰 지정 국선변호사가 자신이 변호할 성폭력 피해자(의뢰인)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됐다. 성폭력 사건으로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보호·변호할 법률 대리인의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스템을 보완·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변호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시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다가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동부경찰은 A 변호사의 성폭력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해당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관련 내용을 털어놓고 수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지정한 국선변호사에게 다시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파악했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데 따라 관련 범죄사실을 추가해 A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A씨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취소했고 법원도 A씨를 국선 변호 업무에서 배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정 구속 완화하나…대법원 예규 조항 24년 만에 개정

실형 선고 때 법정에서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대법원 예규 조항이 24년 만에 개정됐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자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서 법정 구속에 관한 내용 일부를 개정해 시행했다.

제57조에 피고인의 법정 구속 기준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꾼 것이다.

1997년 1월 1일 시행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 요령에 실형을 선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는 조항을 둔 지 24년 만이다.

법정 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받았을 때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로 현장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을 말한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0타경4578	1	목포시 영산로676-7, 101동 14층 1403호 [석현동,현대아파트] 84.945㎡	아파트	84,000,000 84,000,000	
2020타경4721	1	목포시 양을로196번길7, 에이동 5층 502호 [용당동,용일아파트] 82.23㎡	아파트	60,400,000 60,4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0타경5502	1	목포시 용해동 718-32 240㎡	대	339,753,840 339,753,84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목포시 용당로 301 1층97.78㎡ 2층74.96㎡ 2.97㎡ 부속건물 광[현황소재불명] 제시외 창고 등 105.9㎡	간이음식점및주택		
		동소 301[현황본건물은718-32지상소재] 1층72.68㎡[점포] 2층89.67㎡[다방] 3층63.16㎡[주택] 84.1㎡[지하실]	단독주택		
2020타경5625	1	목포시 용당동 977-67 198㎡	대	92,631,490 92,631,49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목포시 용당로254-1 1층87.66㎡ 2층49.23㎡ 부속건물 광1.44㎡ 제시외 창고등5.3㎡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20타경4257	1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115-1 1260㎡ 제시외 냉장설비 외	잡종지	149,306,300 149,306,3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및수목포함매각.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에의한기계기구및제시외기계기구포함매각.기계기구목록의냉장설비소재불명.제시외건물2-2]작업장151㎡과2-3]가추23.4㎡는타지번에걸쳐소재하여정확한측량요
		무안군 현경면 장군로 757-16 189㎡ 165.36㎡[창고및산지농산물가공공장] 부속건물 작업장 119㎡[소재불명] 제시외 작업장 등 414.1㎡[물건번호1:창대냉동기계[대표김한종]로부터2020.7.27유치권신고[냉동기계및주변기기설치공사비용금96,648,000원]가있었으나성립여부불명.경매목적물내에'유치권'표시있음[2020.7.30자현황조사서참조]	저온저장창고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2020타경5007	1	무안군 삼향읍 임성리 산11-1 1653㎡[일부 가인접필지통행에필요한도로로이용중]	임야	75,717,000 75,717,000	
2020타경5076	1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1209 4061.2㎡	답	73,101,600 73,101,6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5311	1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1861 1404.1㎡	답	19,657,400 19,657,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5373	1	목포시 대양동 65-2 827㎡[현황전및일부도로]	임야	274,233,000 274,233,000	일괄매각.목록2현황주거나지,전및도로
		동소 65-22 161㎡	임야		
2020타경52935 2020타경54207 [중복]	1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480-71 10764㎡ 제시외 기계실 등 11.5㎡	잡종지	2,434,321,500 2,434,321,5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및기계기구[공작물]포함매각.이동가능한컨테이너2동매각제외.목록3현황비포장진입로및잡종지
		동소 480-74 3433㎡ 제시외 화장실 등 9㎡	전		
		동소 480-59 711㎡	잡종지		
		동소 480-75 150㎡[현황묵전[4항공유자태일해운[유]의지분24/40전부] 제시외 모래가공시설 콘크리트3식,기계기구[공작물]	전		
2020타경53372	1	영암군 삼호읍 용양리 158-1 270㎡	대	133,603,000 133,603,000	일괄매각
		동소 158-3 1㎡[물건번호1:매각제외철재컨테이너박스소재[지적경계상에걸쳐소재하는것으로파악]]	대		
2020타경53884	1	무안군 운남면 동암리 1322-40 1686㎡	잡종지	18,546,000 18,546,000	
2020타경54023	1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산29 5207㎡[이길용지분1/2전부]	임야	7,835,710 7,835,71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맹지
		동소 산29-1 5206㎡[이길용지분1/2전부]	임야		
2020타경54436	1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1010-3 1053㎡[일부 소하천예정지]	답	16,848,000 16,84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0타경2794	1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274, 2층 205호 [남악도청프라자] 193.14㎡	근린시설	489,000,000 489,000,000	
2020타경5632	1	무안군 삼향읍 대죽동로15번길30, 4층 402호 [신세계프라자] 74.055㎡[대지권비율이 484분의28.6574이나484.1분의28.6574의오기로추정]	근린시설	100,000,000 100,000,000	4층용도가체육도장이나건축물대장상사무소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1. 2. 8.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1. 2. 15. [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잠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1. 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오재홍